

“수산 1번지 전남으로”... 귀어 꾸준히 늘어

지난해 257가구 귀촌...전년보다 23% 증가 완도·장흥 등 고소득 업종 김·전복양식 선호 도, 창업 자금·기술지도 등 행정 지원 만전

전복이나 김 양식을 위해 전남도로 귀어(歸漁)하는 타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수산물 생산 전국 1위의 전남도에서 연수시 1억원 이상 고소득 어가가 늘고 도 시내 일자리 부족,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등의 요인이 맞물려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남도는 16일 “2013년 한해 동안 경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257가구가 귀어, 지난해(209가구)보다 23% 늘었다”고 밝혔다. 제2의 인생을 꿈꾸는 50대 이상의 귀어 가구는 지난해(95가구)에 비해 31%나 늘어난 125가구였으며, 20~30대 귀어 가구도 전체의 26%를 차지해 앞으로 전남 수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귀어가 분포를 시·군 별로 분석해 보면 완도군이 64가구로 25%, 장흥군 57가구(22%), 해남군 45가구(17%), 여수시 25가구(10%)를 차지해 수산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군으로 귀어가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별로는 해조류양식이 105가구로 41%, 패류양식이 84가구로 33%, 어선어업이 33가구로 13%를 차지하는 등 도내 고소득 업종인 김과 전복 양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패류와 해조류 양식은 전남의 대표적 고소득 업종으로 1억원 이상 어가(2275여가) 중 55%를 차지하고 있다.

귀어 전 직업은 자영업이 67가구로 26%, 사무직이 61가구로 24%, 건설업이 29가구로 11%, 생산직이 24가구로 9% 순이었으며, 귀어 전 거주지는 경기도가 88가구로 34%, 광주가 53가구로 21%, 서울이 41가구로 16%, 인천이 18가구로 7% 순이었다.

이순만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앞으로도 귀어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수산업 창업 및 주택 구입·수리 등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귀어 지원 센터 운영으로 외지인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유한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군 ‘정책실명제’ 심의 58건 중점관리 사업 선정

무안군은 정부3.0 취지에 맞춰 ‘정책 실명제’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무안군은 최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58건의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해안 관광도로 개설, 남악 복합주민센터 건립 등 5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1건 ▲무안양과 활용 제품개발 연구용역 등 5000만원 이상의 용역 2건 ▲기화화 단지 조성 등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사업 15건이다.

앞으로 군은 중점관리 대상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의 실명과 관련기관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나갈 계획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향칠나무 심기

진도군 주민과 공직자들이 제69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4일 진도군 군내면 월거리 아산에 향칠나무를 심고 있다. 진도군은 지역에서 잘 자라는 향토수종인 난대수종을 지속적으로 식재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제공>

목포 도심 도축장 외곽 이전한다

대양동 쓰레기매립장 부지에 내달 건물 신축 연내 완공

목포시내 공동주택 한복판에 있던 도축장이 시 외곽으로 이전된다.

1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심한 악취와 소음 등으로 집단 민원이 제기된 석현동 목포 도축장이 대양동 쓰레기매립장내 환경에너지센터 부근으로 옮겨간다.

도축장 운영업체는 다음달 부지 1만3000㎡에 도축장 신축 공사에 들어가 연말에 완공,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시는 이전 보상비로 41억원을 업체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22억원을 썼다.

지난 1997년 문을 연 목포 도축장(7542㎡ 규모)은 목포시를 비롯해 무안, 신안군 등 서남권 지역민에게

축산물을 공급해 왔다.

하지만 도축장 인근 옛 석현 산업단지가 2000년 공업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돼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되면서 이웃 거주 주민들이 도축장의 악취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후 지난 2005년부터 목포 도축장 이전을 추진했지만 이전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 도축장은 소음과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현대식 설비를 신축한다”며 “서남권 7개 시·군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산업현장 재해예방·안전보건 서비스

안전보건공단, 전남서부지도원 개원

전남도 서부지역 산업현장에 산재 예방과 안전 보건 서비스를 지원하는 안전보건공단 전남 서부 지도원(원장 최수봉)이 지난 12일 개원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주영순 국회의원과 이신석 한국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시민식 광주 지방공용노동청장,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개원식은 노·사 대표의 안전문화 정착 결의문 채택과 주요 참석자의 대형 무재해기에 재해감소 결의 서명, 현판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 서부 지도원은 목포시와 영암·무안·장흥·강진·해남·신안·완도·진도군 등 9개 시·군 2만4000여개 사업장(근로자 17만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백현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전남 서부지도원 개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기술을 보다 가까이서 제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도원 개원에 따라 산업재해 감소와 더불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봉 전남 서부지도원장은 “공단 목표출장소에서 올해 지도원으로 승격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투명경영과 합리적인 업무수행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최수봉 전남 서부지도원장은 “공단 목표출장소에서 올해 지도원으로 승격 됐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투명경영과 합리적인 업무수행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산업재해 예방 전문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전북

단신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언제 지정하나

재단, 기념일 제정 추진위 해체 후 3년째 논의조차 안해 단체별 선호 날짜 다른데다 여론조사 방안도 ‘호지부지’

1894년 동학 농민혁명을 기리는 국가 기념일의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16일 동학재단 등에 따르면 2011년 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가 해체된 이후 현재까지 3년째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당시 추진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날짜를 정하고 정부에 기념일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국 20여개의 동학단체와 지역별로 선호하는 날이 각기 달라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동학재단이 2012년에 여론조사를 통해 기념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 역시 호지부지였다.

기념일 제정이 장기화하는 것은 지역과 동학단체들의 견해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읍은 고부 봉기일(양력 2월 15일)이나 황토현 전승일(5월 10일)을 선호하고 있지만, 고창은 무장기포일(4월 25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 동학단체와 학계에서는 여기에 ‘동학 특별법’ 제정일인 3월 5일, 전 주성 점령일인 5월 31일, 우금치 전투일인 12월 5일 등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읍시가 ‘지역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특별법 제정으로 하자’고 태도 변화를 보였지만 논의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동학재단은 오는 10월로 예정된 동학 농민혁명 120주년 기념행사를 마무리한 후야 기념일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동학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만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들이 거세지고 있다. 기념일을 제정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주관해야 할 동학 관련 행사 등이 여전히 지역 차원의 행사에 머물고 있고 동학혁명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관계자는 “특별법까지 만들어놓고도 소소한 이해관계 때문에 기념일을 제정하지 못하는 것은 유족들 처지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혁명의 정신을 기리려면 사심을 버리고 서둘러 국가 기념일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김주열 열사 추모제 헌화

남원지역 청소년들이 지난 14일 남원시 금지면에서 열린 제54주기 김주열 열사 추모제헌에서 헌화하고 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군산항만청, 간출암 3곳에 등표 설치

군산 지방해양항만청은 선박의 안전항행과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간출암 3곳에 등표를 설치한다.

간출암(干出巖)은 해수면이 낮을 때 노출되는 암반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밀물 때에는 물속에 잠기는 바위를 의미한다. 등표는 등불을 이용해 암초나 얕은 곳의 위치를 표시하는 항로 표지를 말한다.

군은 9월까지 14억원을 들여 군산 선유도 남서쪽, 부안 공항항, 위도 정금도에 등표를 설치할 예정이다.

군산 항만청은 “등표의 불빛은 반경 15km에서 확인할 수 있어 안전 항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준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농기센터, 농기계 임대료 대폭 인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대폭 인하했다.

센터는 지난 12일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를 열고 원관 쟁기 등 44기종의 임대료를 대폭 인하했다. 센터는 올해 논두렁 조성기 등 35대의 농

기계 임대료를 대폭 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다. 센터 관계자는 “2015년에는 북부권에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순창군, 미생물 자원화 추진팀 발족

순창군이 최근 혁신지원기관(장류사업소·농업기술센터·건강장수연구소·발효미생물 관리센터·지역대학·지자체 연구소)이 참여하는 미생물 자원화 추진팀 발족식을 가졌다. 이번 발족식에서 전문가들은 향후 기획회의 등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대형 국책과제를 확보

하는 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황숙주 군수는 “순창을 바이오 미생물 산업의 일변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친환경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